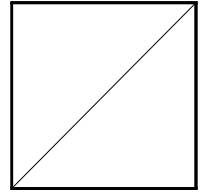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43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6. 7. (제 11차)	

(주)경남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6. 7.

1. 의결주문

(주)경남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경남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3.3.23.~2023.3.29.)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주)경남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제69조(과태료)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0조의7(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2023.5.11.) 심의필

- 제1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6.1.) 심의필

<별지>

(주)경남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4,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법적근거 :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69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2. 조치사유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 (주)경남은행은 20xx.x.xx. 이사 x명*이 불참하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득하지 않은 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하고 20xx.x.xx. 동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대출일 : 20xx.x.xx. (만기연장), 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회전대출(한도거래), 대출금액 : x,xxx억원]****를 한 사실이 있음

* 비상임이사 □□□

** □□□□금융지주가 □□□□ 및 □□□□□□□□에 대해 지분 100% 보유

*** xx.x억원(20xx.x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 20xx.x.xx. 신규 약정(재적이사 전원 찬성), 20xx~20xx년중 만기 x회 연장
(재적이사 전원 찬성)

< 붙임 >

관계 법규

1. 은행법규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 ②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5조의2 제4항 또는 제35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다음 각 목의 합계액으로 할 것

가.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補填)할 수 있는 것

나.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자본잉여금 등으로서 은행의 손실을 가목의 기본자본 다음의 순위로 보전할 수 있는 것

2. 보완자본은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후순위채권 등 은행의 청산 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출

2. 지급보증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6. 은행이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제20조의7(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⑤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35조의2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거. 은행이 법 제35조의2 제4항 또는 제35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6호	10,000

□ 「은행업감독규정」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항 및 영 제1조의2에 의한 자기자본은 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영 제1조의2 제1호 가목에 따른 자본(이하 "보

통주자본"이라 한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본(이하 "기타기본자본"이라 한다) 및 보완자본에서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올기금은 전액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 및 영 제1조의3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③ 영 제20조의7 제5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영 제20조의7 제6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2] **신용공여의 범위**

1. (신용공여의 범위)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난내 및 난외 항목으로 한다.

계정	대분류	소분류
은행 계정	대차대조표 난내 (대출채권)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매입어음, 매입외환, 팩토링채권, 신용카드채권, 직불카드채권,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콜론, 사모사채
	(유가증권)	CP(보증어음 포함), 대여유가증권, 공모사채, 후순위수익증권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예치금
	난외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자산유동화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원화대출약정, 외화대출약정, 역외외화대출약정, 배서어음,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매입약정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매입약정 포함)

2. 검사 및 제재 관련 법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

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 (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은행 검사2국
연 락 처	02-2100-2982	02-3145-7208